

“광주·전남 균특법개정안 선제적 대응을”

광주전남연구원 ‘정책 브리프’ 초광역권 설정 등 필요성 강조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초광역권의 발전계획 수립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전남이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7일 광주전남 정책 Brief(브리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광주전남에의 시사점’에서 균특법 개정안의 핵심을 분석하

고, 광주전남 지역의 상생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이번 균특법 개정으로 현행 ‘기초생활권’과 ‘광역협력권’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권’으로 대체되면서 정부의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하고 혁신도시계정을 신설하는 등 균특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들은 “인구감소 및 노령화,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기초지자체의 역량이

약화된 상태”라며 “균형발전, 규모의 경제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주전남을 비롯해 인접 지자체까지 확장된 초광역권을 설정하고, ‘(가칭)초광역권 협력사업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균특법 개정안에 ‘혁신도시특별계정’이 신설됨에 따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와 전남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초광역권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초광역권 설정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지속가능연구실장은 “지역정책과 산업정책이 별개로 추진될 경우 사업 간 연계성 및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혁신도시 확대,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혁신도시특별회계의 지속적·추가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균특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시, 설 연휴 생활치료센터 특별관리

5개 실무반 24시간 운영

광주시는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광주생활치료센터 특별운영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소방학교 생활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연수원 기숙사 등 2곳에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확진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6일 현재 확진자 3,603명이 입소 후 3,476명이 퇴소했으며, 현재 127명이 입소해 치료 중에 있다.

광주시는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관을 총괄 단장으로 각 센터별 공무원, 의료진 등 5개 운영 실무반을 편성해 24시간 상주하며 확진자 입소부터 퇴소 시까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각 센터별로 입소자에게 생필품 구호 꾸러미(키트), 음식, 택배 및 기타 민원 처리 등 편의를 제공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시설 내외부 방역·소독·정소, 의료폐기물 처리를 하고 매일 확진자의 체온, 맥박,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등 수

시로 확진자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위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 경찰지구대, 협력병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나라별 다양한 금기 음식을 사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에서도 위축되지 않도록 확진자에게 위로의 메시지와 한과, 떡 등 설 특별식을 제공해 심리 안정과 광주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동하 시 안전정책관은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 코로나19 대응에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며 “생활치료센터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친지와 떨어져 지내는 확진자들이 설 연휴에도 외로움을 덜 수 있게 광주의 온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광주 시민권익위, 정책제안 7건 권고

중앙공원 1지구 진출입로 개설 등 30일 내 ‘바로소통광주’에 공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3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시민 제안에 대한 정책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바로소통광주’ 등을 통해 접수된 9개의 시민 제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 가운데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진입로 변경 ▲푸른길과 제1순환도로 자전거 도로 조성 ▲운암동·중외공원 연결 브릿지 조성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재검토 등 7건을 광주시에 권고했다.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진입로 변경’에 대해서는 금화로에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과 교차로 설치, 연화로 방면의 교통흐름 및 도로개설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계획 소망도로 개설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푸른길과 제1순환도로 자전거 도로 조성’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지를 선정해 확대 설치 중인 자전거 전용도로 외에 제1순환도로에 대중교통 시스템과 연계한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3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바로소통광주’ 등을 통해 접수된 9개의 시민 제안에 대한 정책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 제공

‘운암동·중외공원 연결 브릿지 조성’ 제안에 대해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및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해 점차 철거하는 추세인 보도육교 대신, 중외공원 교차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 활주로 형 표지, 미끄럼 방지, 요철 등의 다양한 시설물 설치를 추가 검토하고, 야간 보행자 시인성 향상을 위해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권고했다.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재검토’ 제안에 대해서는 제4수원지 보호구역 해제 이후 수질 악화가 우려되므로 보호구역 해제 전 지속적인 수질관리 및 수질 보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제4수원지를 관리하는 각화정수장은 광주시가 환경부 승인을 받

아 폐쇄기로 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정수장 기능이 상실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정책 개선을 권고받은 부서는 30일 이내에 개선 내용을 담은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민권익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진사항은 ‘바로소통광주’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오선우 기자

시, 공공심야약국 3곳 추가 운영

광주시는 이달부터 365일 연중무휴로 심야시간대 전문약사에게 복약지도 받고 의약품 구입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서구와 북구 등 2곳에서 운영한 공공심야약국을 올해부터는 동구, 남구, 광산구에서 1곳씩 추가해 총 5곳을 운영한다.

추가로 선정된 공공심야약국은 광역시 약사회가 약국의 접근성과 의약품 구비 내역, 지속가능성 등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공공심야약국은 2020년부터 365일 연중무휴로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의약품 판매 8,713건, 조제 208건, 전화상담 55건을 이용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방문객 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4.7%가 이용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고 99.6%의 응답자가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

이달 주 시 복지건강국장은 “시민들이 심야시간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한국섬진흥원, 자문위원회 본격 활동

제1기 위원 16명 구성

한국섬진흥원 제1기 정책자문위원회가 27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정책자문위는 흥원원의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마련한 내부 자문기구다.

1기 정책자문위는 홍석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이용규 (서한국도서학회 회장, 이정호 섬주민연합중앙회 회장, 김영미 상명대 교수, 이성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 섬 관련 기관·단체, 대학교수, 연구기관 및 현장활동가,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촉기간은 1년이다.

진흥원 내부 운영규칙에 따라 정책자문위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또 안전 건 발생시마다 수시회의 열여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는 정책자문위 세부 운영계획과 함께 올해 진흥원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후 위원들의 정책 제안, 기타 의견제시 등이 이뤄졌다.

앞으로 한국섬진흥원은 주요사업과 위원회 전문분야를 매칭한 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책자문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향후 정책자문위 구성과 활동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진흥원 경영 관련 최고 자문기구로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길용현 기자

내달부터 시장·교육감 선거 후보등록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1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광주시선거관리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과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제출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아끼미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차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시·도선관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상황을 고려해 다수가 집합하는 예비후보자등록설명회 대신 임후보예정자 대상 개별·비대면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길용현·오선우 기자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